

사회

■ 전호중 조선대 총장 전격 사퇴 왜?

관·상여행렬 퇴진 압박에 심적 충격

“대학 품위·권위 실추 더 이상 안된다” 결단

최근 한달 새 조선대 본관에는 ‘관(棺)’이 3차례나 등장했다.

두번은 복도를 지나는 학생과 외부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총장실 현관 앞에 놓였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총장실 탁자에 놓였다. 관에는 ‘조선대 2등 총장직구, 조선대 법인이사직구’라고 글귀가 써여 있었다.

교내 곳곳에는 총장과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30여개가 나부꼈다.

결선투표에서 2위였던 전호중 총장의 재선이 결정된 지난 9월26일 이후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조합이 주축인 ‘2등총장 이사회 퇴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직원들은 퇴진 쟁기대회, 상여행렬 퍼포먼스 등을 통해 전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나 최종 총장 선임 과정에서 탈락한 서재홍 교수가 제출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총장직무 집행정지 효력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전 총장의 총장직 수행에 대한 의지는 굳건해 보였다. 또한 전 총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퇴진을 요구하는 구성원들과 직간접적인 협상 채널을 가동하는 등 활로를 모색해왔다.

하지만 최근 ‘관’을 집무실까지 들여온 데 대해 심적 충격을 받은데다 그동안 친분을 맺어왔던 이들이 학교업무는 물론 다양한 사적인 교류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자 총장직 수행에 회의를 느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두 달여 가까이 사퇴를 강요받는 상황에서도 꺾기지 않고 견뎌왔던 전 총장은 퇴진을 요구하는 상여행렬, 관 전시 등 대학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자신의 고통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조선대의 품위와 권위가 실추됨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전 총장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 10kg가까이 체중이 감소, 휴가를 내고 지난주부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건강을 염려한 노모의 걱정을 뿌리치지 못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진을 요구해 온 구성원들은 “구교적 결단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번 총장선거 이후 전개 상황을 지켜본 조선대 구성원들은 “직위만 반복과 불신이 커지고, 대외적으로 수치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준 조선대가 어디로 갈 지 모르겠다”며

자조하는 분위기다.

전 총장의 사퇴 수리 여부는 다음 달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공석이 된 총장직은 규정에 따라 비상임 부총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새로운 총장 선출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새로운 선출 규정 논의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원만하게 총장선출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지난주부터 휴가에 들어갔던 조선대 전호중 총장이 28일 오전 잠시 출근, 처장단 회의에 참석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집무실을 떠난 후 빈 의자만 놓여 있다.

대검 ‘벤츠 여검사’ 의혹 알고도 방치

지난 7월 진정 접수 최근에 사표 수리

대검찰청 검찰본부가 이른바 ‘벤츠 여검사’ 의혹과 관련, 이미 지난 7월 진정을 접수했지만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넉달 가량 검찰을 벌이지 않다가 최근 해당 여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안병기 검찰1과장은 28일 간담회에서 “당초 진정 내용에는 사건 청탁 대가로 사별 핸드백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고 벤츠를 제공받은 의혹만 있었는데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당시에는 검사장에게 금품

을 줬다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해당 여검사는 이달 중순에 일신상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당시로서는 수사나 검찰 대상이 아니어서 (사표가)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최근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서 사표를 낸 검사 A(여·36)씨가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변호사 B(49)씨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사건청탁과 관련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에는 여검사가 검찰 수사사건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고 변호사에게 540만원 상당의 사별 핸드백 대금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연합뉴스

부장판사들 FTA 비판 글 잇따라

페이스북에 올려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글을 올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또 다른 부장판사가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이모 부장판사(42·연수원 23기)는 FTA 비준안이 처리된 지난 22일 “드라마 계획을 보고 있던 황산벌 전투가 나온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FTA 비판글을 올린 인천지법 최모

부장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지난 25일에는 “비준안을 통과시킨 신국의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비준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반드시 해야죠. 대통령님의 말씀 뱃속까지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글을 답했다.

/연합뉴스

장성 공무원 이중취업하고 핵심 기술 빼돌려 회사 설립

전남도와 42억 투자 MOU도

장성군 현직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 알게 된 사기업에 이중 취업한 것도 모자라 업체의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다. 특히 이 공무원은 핵심 기술을 근거로 회사를 설립한 뒤 전남도와 투자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H사에 따르면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장성군 공무원 A(8급)씨를 접촉, 관련 사업을 수주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H사에 취업했으며, 그 뒤 8월 16일자로 장성군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한 채 사기업에 취업한 A씨는 이 업체로부터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공무원 영리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 등을 어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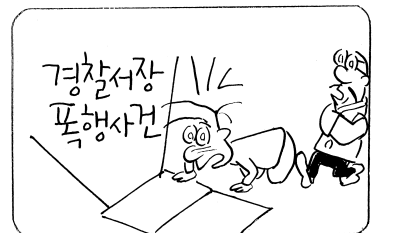
H사 관계자는 “A씨가 공식 직분을 유지한 채 4개월간 1200여만원의 급여

를 지급받은 후 사직하면서 핵심 기술을 USB에 담아 유출했다”며 “유출된 기술을 사업목적으로 신규 회사를 차려 지난 4월 전남도와 MOU까지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육아휴직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근무한 뒤 사직, 곧바로 같은해 12월 설립된 동종 업종인 B사에 임원(이사)으로 몸담았다가 H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남도는 A씨가 임원으로 몸담았던 B회사와 기술 검증 등의 과정 없이 지난 4월19일 42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H회사에 이중 취업한 부분과 동종 업종에 신규 설립한 회사에 자신이 사내 이사로 등재된 부분은 잘못됐다”면서도 “기술 유출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성군은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지난 7월 A씨에 대해서 영리업무 및 결직 근무위반 사실을 확인,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나원침 (8448) 김종두



술 취해 노모·아들 폭행

광주광산경찰청은 28일 술에 취해 80대 노모와 아들을 폭행한 김모(62)씨에 대해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밤 11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본인의 집에서 어머니(82)와 아들(31)을 폭행해 어머니를 등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술을 마시지 않았던 김씨는 이날 자신의 생일을 맞아 아들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경찰-검사 ‘맞짱토론’

오늘 ‘수사권 조정안’ 놓고 격돌

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장외에서 신경전을 벌였던 경찰과 검찰이 토론회라는 공개적인 장에서 공식 격돌한다.

28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은 ‘수설네트워크 뉴스 서비스인 ‘워키트릭’과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검사와의 맞짱토론’을 제안, 일선 경찰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는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조정을 맡은 총리실이 4개월 남는 기간에 TV토론회나 공청회, 학계 의견 청취 등의 과정 없이 두 차례 의견 수렴과 단 한번의 합숙토론을 통해 직권중 재안을 입법예고해버렸다”면서 “조정안의 내용보다 절차 측면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국회의원 14명이 29일 국회에서 진행하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는 경찰과 검찰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난상토론을 벌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에서는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과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이, 검찰 측에서는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과 노명선 성관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서로의 입장을 대변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에는 일선 경찰들이 세(勢) 과시 차원에서 대거 참석할 예정이고 행사 주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고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

술먹고 사우나서 남성 더듬다 달미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의 신체를 에루하는 등 추행했다가 경찰서행.

○28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A(37)씨는 이날 새벽 5시에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31)씨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

○요리사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식당 영업이 끝나고 동료들과 술을 한잔 한 뒤 사우나에 왔는데,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Table with 3 columns: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defendants.

Table with 3 columns: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defendants.

Table with 3 columns: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defendants.

Table with 3 columns: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defendants.

Table with 3 columns: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defendants.

제판장 판사 강 완 수

Table with 3 columns: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defendants.

제판장 판사 박 미 화

Table with 3 columns: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defendants.

Advertisement for SM Solomon Credit Information. Includes text like '복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and 'SM 솔로몬신용정보'.